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26년 1월 15일 (목) 15:00 ~ 19:10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위원) 강은희, 김 건, 김 용, 김주성,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윤건영, 이보미,
이슬기, 이 현, 장신호, 최은옥

(총 19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21인 중 19인 출석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회의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님과 김경희 상임위원님께서 임명 되셨고, 김 용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반상진 위원님, 이슬기 위원님, 이 현 위원님, 전은영 위원님, 총 여섯 분이 위촉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하고 시작하지요.
- 먼저 이광호 상임위원님.
- (이광호 상임위원) 앞으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 (김경희 상임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 정신에 맞춰서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하는 데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많이 달라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 (위원장) 김 용 위원님.
- (김 용 위원) 국교위가 해묵은 과제를 잘 해결하고, 또 긴 방향을 세우는 일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 (박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이번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공교육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두루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 (위원장) 반상진 위원님.
- (반상진 위원) 반갑습니다. 반상진이라고 합니다. 국교위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가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 (위원장) 이슬기 위원님.
- (이슬기 위원) 안녕하세요.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슬기입니다. 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고등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생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인재 같은 그런 사회적인 관심사가 교육의 문제로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표출이 어떤 문제제기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 (위원장) 이 현 위원님.
- (이 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이 현입니다. 나라 전체로 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현안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결되고 아주 중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의논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탄탄하고 새롭게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 (위원장)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 2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21명의 위원님이 모두 위촉되셔서 매우 기쁜 날입니다. 교육현장에 풀지 못한 난제들이 매우 많고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반드시 잘 해 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 교육철학이 이곳에서 활짝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추천 배경은 다르지만 오직 학생 성장과 교육 발전만을 생각하시고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들께서 국가교

육위원회에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가 지난 9월 19일 제60차 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과 국민께 공개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히 K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의 논의과정이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오늘 안건은 총 4건의 심의·의결안건과 1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됩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두 안건은 교육과정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제63차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드렸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예고 결과와 그간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하 위원회로서 일반 국민 500명으로 구성되는 상시적 대국민 소통창구입니다.
- 다음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입니다. 전문위원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운영근거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운영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③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전)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공개
- (심의·의결안전)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공개
- (심의·의결안전)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 공개
- (심의·의결안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공개
- (보고안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 공개

④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지난 제63차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3차 회의와 제24차 회의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2026년 1월 9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두 차례 회의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의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과 의제별 집필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격차와 학교 규모 차이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26년 1월 8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님별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2026년 1월 7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인 만큼 특별위원회 운영방식과 논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제4차·제5차 회의가 각각 2025년 12월 22일, 2026년 1월 6일, 2026년 1월 1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세 차례 회의에서는 영유아교육 분야의 각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문사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정책 의제를 발제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가 2026년 1월 2일, 2026년 1월 1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각각의 회의에서는 인재의 개념과 인재강국의 의미 정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가 각각 2025년 12월 29일, 2026년 1월 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법률 등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과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다음은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활동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에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위원장님 취임 이후 100일간의 활동 기록과 앞으로의 국가교육위원회 중점 업무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교육위원장님과 특별위원장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장님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는 9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함께 모여서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현재의 운영 현황에 대한 공유가 있으셨습니다. 2016년 1월 6일에는 3개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장님들과 국가교육위원장이 함께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활동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매

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결론적인 부분만 본위원회에 공유하기 전에 되어 가는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때 토론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에서든 대학입학 제도라든가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 등 어느 사안 하나 관심 두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결론에 다가가서 우리 본위원회에 공유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조금 늦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자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교육청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도 같은 주제 하에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와 정보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 …)

다른 질문 없으면 그동안의 활동 보고는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요.

5 주요 내용

가. (심의·의결안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 (간사) 첫 번째 안건인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안건 이해를 돕고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성열관 위원장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류방란 위원장님, 정책연구에 참여하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형미 본부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는 김영진 학교정책관님, 김한승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님, 최현석 고교학점제지원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 (보고자A)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14쪽입니다. 국교위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즉, 개정을 추진할 때 그 개정의 진행 여부를 의결하고 이후 그 개정의 계획을 의결하여 개발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수립·변경(안)을 의결한 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마련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시도록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배경은 교육과정 개발 전 절차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61차 회의에서 개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62차 회의에서 개정 계획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개발 착수 후 추진경과는 유목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연구단계부터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시안을 개발하였고, 전문위와 모니터링단, 고교 특위도 자문과 사전검토의 역할을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행하였습니다.
- 15쪽입니다.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협의, 실시간 온라인 공청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3차 회의에서 행정예고(안)을 보고드린 후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붙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고등학교 편성 기준의 차항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동 개정이 26학년도부터 적용 시행됨을 제시합니다.
- 16쪽입니다. 권고사항(안)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안과 함께 전문위, 모니터링단,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연구진 논의를 종합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릴 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에 따른 권고사항의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학점 이수 기준 지침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며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설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하여 설정하되 관련 현행 교육부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 별도 기준 제시도 필요함을 권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 후속조치로 실시 중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방식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도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학생의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도 횟수, 방식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것이 권고사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17쪽입니다. 붙임에 행정예고 의견 제출 현황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78건이 제출되었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개정안 개발과 검토,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측면과 입장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위의 사전검토,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 제출된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자문내용, 연구 주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부의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교육부 지침도 참고하시도록 드렸습니다.

- 이제 전문위 등의 검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전문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B) 안녕하세요. 저희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있으면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대로 저희 전문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학교 현장과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장기간 숙고한 결과, 이수 기준은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그리고 출석률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진술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 의견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한 대로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문 검토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통과목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 20페이지 보시면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모니터링단의 검토의견은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자C)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입니다. 금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니터링단의 의견에 대해서 지난 제63차 회의에서 단장이 기 보고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1쪽입니다. 모니터링단 단장은 지난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단원들 대부분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의 1안, 2안에 대한 의견은 어느 특정 案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없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3안으로 현행과 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 모든 과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 아울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다과목 지도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예산 지원 등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함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고교 특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D)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의 자료 22쪽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이수 기준 설정의 방향성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수 기준으로는 출석률과 성취율을 둘 다 적시하되 성취율의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이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권고1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과목 이수 기준으로 성취율 반영을 지향한다,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으로는 현행과 같이 성취율 반영을 지속하고, 그러나 학교 현황, 제반 여건상 당장 선택과목의 이수 기준으로는 성취율 반영이 무리인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점 이수의 다중 경로 제공, 적절한 전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성취율 반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인해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며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책임교육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책임교육의 합리적 분담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연구결과 발표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연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현황 분석, 학교 현장의 의견,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시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안 개발의 기본방향은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점 이수

기준 설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침 설정의 근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학업성취율 반영 범위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된 법령에서 이미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되 공통과목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출석률 반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배당 기준이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으며, 다만, 현행에서 졸업 시점인 3학년 2학기에 3년간의 이수 학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년도별 학점 이수 상황을 확인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해당 시안 결과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유지하되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보고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인데요. 지난번 회의에서 발언들을 하셨지만 오늘 신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요지만큼은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종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발언을 신청할 때는 방금 교육부 차관님이 하시는 것처럼 명패를 세로로 세우면 됩니다. 제가 살펴보고 세우는 순서에 따라서 발언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교육부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은옥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요. 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부가 기 발표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드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 (최은옥 위원)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좀 듣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교육부 학교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진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 2장짜리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개요와 단계별 이행 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5년 9월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학생 지원 강화와 또 현장의 수용성 제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학생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초·중·고 단계부터 기초학력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습 결손의 누적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저희가 12월에 임시 개통을 해서 아마 올해 2월부터는 이 부분을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증원한다든지 1대 1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등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 교사용 중3 학생 대상 맞춤형 학생 컨설팅 모델을 개발 운영해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그와 함께 진로 학업 설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시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학점제 설명회를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과목과 자기 진로의 연계 부분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선택과목 소개 동영상을 지금 개발 중인데 신학기가 시작되면 전 과목들에 대한 소개 동영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이수 지원과 관련해서 온라인 학교에 기본수학과 기본영어를 개설하고 실제 저희가 학점 이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출석률 기준이 과목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1학점 당 수업량 16시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10월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관련해서 부담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점검했으며, 학생부 기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생부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로 현장 수용성 제고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 현장에 부담이 많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성보 시수를 학점 당 5시수에서 3시수로 감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한 바 있고요. 그리고 출석률 미도달에 대한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최성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시·도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부담과 관련해서 출결 처리 권한을 우리 교과과목 담당 선생님과 담임교사들에게 동시에 부여를 하였으며, 공통과목 세특 기재 분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과목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설과목 등을 중심으로 수업 부담이 있는 과목의 어떤 교과 내용이라든지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도 적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시간표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기반으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서 저희가 연내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9개가 있는데 올해 내에 이러한 부분을 전 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로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원 증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과목 개설이 어려워서 격차 해소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26년도에는 소규모 읍면지역 학교의 강화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 간 교류를 통해 교차수강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NEIS라든지 NEIS+ 기능 강화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학점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또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점 이수 기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손덕제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지요.
- (손덕제 위원) 발언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예고(안)을 하고 난 뒤에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의 의견을 내었었고, 또 각 학교에서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 합니다.
- (보고자A) 아까 보고를 드린 자료에 저희가 붙임1로 17페이지에 전체 현황을 드렸습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청이 전체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안내해서 저희 국교위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 또 공문 등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서 행정예고에 대해서 78건의 의견이 기간 중에 접수가 되었는데 78건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 저희가 검토 결과를 드렸고요. 아까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손덕제 위원) 그러면 접수된 내용이 보면 출석률만을 반영하여 이수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지요?
- (보고자A) 78건의 내용이 같았습니다.
- (손덕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새로 오신 우리 상임위원 두 분과 또 새로 함께하게 된 신입 국교위원님들, 함께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둘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적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1, 2안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도 '출석률만 반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의견을 내지 않은 학교도 다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정예고(안)을 봤는데 권고사항에 들어있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권고안의 내용을 교육부 1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또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장학관님들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몇 명 장학사님들이 그에 대해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또 출석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그런 회의에서나 또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어떤 오해가 있어서 저는 그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 국교위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은 15일에 하는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정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예, 맞습니다. 토론 대상입니다.
- (손덕제 위원) 그래서 오늘 국교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국교위원으로서 행정예고(안)은 그대로 하되 권고안의 내용을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 적용하고 진로·융합 선택과목과 전문교과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는 권고안을 주장합니다.
-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교육 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현장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표도 교원 3단체에서 했던 설문조사에 대한 표를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한 25% 정도만 찬성할 뿐이지 나머지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설문도 무려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효과가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교원과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 학생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근을 해도 졸업을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은 지금은 초·중·고 모두 출석일수로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학업성취율이 기준으로 들어오면 개근을 해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그리고 민원은 오롯이 학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학교의 교육 활동은 위축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 세 번째는 효과 없는 최성보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큼니다. 최성보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준비 단계에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유예를 해서 나중에 효과 있도록, 고교학점제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성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한 뒤에 고등학교에서 최성보를 적용해야 됩니다. 최성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미만의 미이수 학생들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99%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시험문제를 쉽게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 방문했을 때 예방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쭙보니까 가장 바쁜 3월에 미도달될 만한 학생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미리 '너희는 미도달될 것 같으니까 예방지도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한테 우리 애가 왜 거기에 속해야 되느냐고 바로 민원 전화가 왔대요. 그런 식의 민원과 반발로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계시고, 실제로 예방지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여쭙보니까 그냥 체크리스트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사인 받고 마는 것이 예방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없는 예방지도로 예비 낙인 학생을 만드는 구조부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도달 학생의 보충지도 또한 형식적으로 한 학점 당 3시간만 앉아있으면 이수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쭙봤더니 EBS 방송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이것 몇 시간 봐야 되는데 봤니?' 해서 '예.' 하면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과 1시간은 대면해야 된다고 해서 대면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생님에 대한 수당 지급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진로·융합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또 고교학점제 본질을 살리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2015 진로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상대평가

로 바뀌서 이렇게 다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멀어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고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이것은 조속히 절대평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교 특별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이기도 하고요. 현재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현장에서도 찬성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취지의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며,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도입 취지를 살리는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등학교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지요. 이런 학생들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독증, 난산으로 인해서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성실하게 졸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업중단속려제라는 것을 해 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런 부담까지 안게 되면 정말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품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체제를 정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잘 쌓아서 한 5~6년 뒤에 고교학점제를 정말 아이들이 잘 선택을 해서 기초학력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교육부 1안인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현장 적합성이 낮고, 그 목적인 책임교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수 기준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과 진로·융합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 (이보미 위원) 저도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 이보미 위원님.
- (이보미 위원) 손덕제 위원님이 교원단체 3개의 공통된 입장을 잘 정리,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16쪽에 이렇게 지침을 권고해 주셨는데 여전히 3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성보의 학교 자율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포함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지금 3월에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없다면 저는 3월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학교 현장에서 최성보 지도를 온전히 감당해 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혼란으로 작용이 될 텐데 최성보라는 것은 그 반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1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의 문턱을 계속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선생님이 어떤 방식의 지도를 하든 자체적으로 지도에 임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유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많이 애를 쓰셨지만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든지 지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설과목 등을 중심으로 다과목 수업 지원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다과목 수업 지원 연수를 하면 연수 부담만 늘어나고요. 그냥 교사를 확충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만 반영하는 것이 안 된다면 말씀처럼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원 간에 직접 질문하는 경우에는 제가 답변 의사를 물어서 응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은옥 위원님,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3월의 준비 정도를 물

었습니다.

- (최은옥 위원) 죄송한데 이보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보미 위원) 16쪽에 고교학점제 관련 후속조치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미도달, 미이수 학생에 대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온라인 학교 등)포함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행 시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 운영한다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 (최은옥 위원) 17개 시·도 전체에 온라인 학교를 지금 다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연취현 위원님.
- (연취현 위원) 먼저 1안, 2안을 놓고 토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2018년,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고요. 취지와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선생님들의 어려움만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 점이 사실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이런 식으로 땀질 처방하는 논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려면 도입 취지나 본질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목 미이수가 일단 있을 것이고, 과목 미이수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을 5교시에서 3교시로 줄이면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 최성보를 남겨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고교학점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굳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案을 보면 온라인 학교에 기본수학, 영어를 넣겠다고 하는데 최은옥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공통과목인지 선택과목인지, 사실 기초학력 보완이 필요하

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최성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오늘 주신 案을 봤을 때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진로, 학습 설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상담 교사가 필요하고 컨설팅 모델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교육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 시장 보시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학생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수업이 벌써 개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교학점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고교학점제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심지어 1인 시위도 정부청사 앞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학생과 학생을 보호하고 또 교육해야 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이대로 1안, 2안 정도에서 미봉책으로, 땀질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요.

-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회의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시다마는 3안, 4안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어떤 목적성 없이 일단 땀질 처방으로 고교학점제를 남겨놓는 형태는 계속 학생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생들 말고 향후 고교에 입학할 학생들,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야 되는 학부모들로서는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교육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신호 위원님.

- (장신호 위원) 감사합니다. 장신호입니다. 저는 먼저 지난 63차 회의 때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지난 63차 회의 때 건의드렸던 부분을 반영해서 잘

마련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과 우리 김영진 국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그중에서 제가 12월에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임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더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이 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잘 다져지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기초학력을 챙기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살피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미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학력을 준비시키고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김영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담교원을 증원해서 배치하겠다는 계획 부분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신 자료의 2쪽인데요.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와 강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선생님의 역할과 선생님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선생님은 일단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학생들의 발달 단계도 이해하고 학생들의 심리, 정서, 인지 단계를 이해하려면 그래도 전문적인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임교원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기초학력의 학습 결손이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읍면지역과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은 학교는 강사를 채용하고 작은 학교는 교수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사실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잘 준비해

주시는 김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교원을 잘 임용하여서 기초학력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우리 차관님과 김영진 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 (박영환 위원) 박영환입니다. 혹시 차관님께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 (박영환 위원) 교육부에서 아까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지원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최은옥 위원)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부 학교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규 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고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지원 대책이 또 나올 것이니까, 오늘 어차피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원 확보 부분,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힘든 그런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물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법령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지금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들이 오늘 결정 방향을 정할 때 답변 내용을 100% 신뢰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아주 비중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장신호 위원)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 (위원장) 잠깐만요. 박영환 위원님이 아직 말씀을 안 마쳤기 때문에...
- (박영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이 지금 학교 현장을 진짜 모르는 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예로 충남의 작은 시군이나 이런 데 가면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교원자격증 있는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퇴직한 교원들을 구합니다. 퇴직이 3월 1일자인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기간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대단히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이 지금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읍면지역의 소규모 강사 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을 문구로 쓴 것이지 실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문구로 나와서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학교에서는 결국 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혼란들을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점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선택형 교육과정을 극대화시킨 것이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웠는데 그 우려가 이 계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게 되면 다교과, 다학년 지도가 불가피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은 시군 간, 지역 간, 도농 간의 격차가 불 보듯 뻔한 것이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의 결과물인데 지금 이 교육부의 계획 자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손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았다

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말씀드리면 최성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학점을 이수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형식화될 우려가 대단히 큼니다. 온라인으로 100%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코로나 사태 때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 학교들을 많이 운영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보충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학교 현장 교사들은 백이면 백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우려들을 충분히 전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형식화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의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도 이미 사실은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부터 학년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6학년 되어서도 덧셈, 뺄셈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심층적인 학문을 다룰 때 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격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충지도를 통해서 5학점을 5시수, 그러니까 1시수 당 5시간을 3시간으로 줄인다 한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도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이 학교 현장에는 대단히 큰 파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교육 팽창도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연수 운영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다과목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원 대책도 보면 학교 현장은 지금 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수업 시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다과목 수업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연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제출된 수립·변경(안)에 한 가지 이상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두더라도 권고사항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내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출석률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지난 회의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왜 했는가, 이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시 다 되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우선 가장 쟁점인 것이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시·도마다 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교학점제, 특히 운영했던 것이 1학년에 해당되는 공통교과 부분입니다. 이 공통교과를 운영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했던 학생들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시도교육청도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보충지도를 해서 미달된 학생들이 많이 회복되었던 것도 작년 연말에 학년이 마무리되면서 현장은 어렵게 조금 더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선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의 얘기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부분, 또 실제 이것을 운영하고 총괄 지휘하는 교육감 입장에서 교원단체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항상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시점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아까 최소 성취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2~3학년 때 한글 이해득이나 분수가 나오는 부분부터 기초학력이 서서히 미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책임이 있느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출발선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온 그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원인을 찾으면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태교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은 너무 극단적인 비교라고 저를 비판하시겠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것을 따져본다면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2년차 앞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작년 9월에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3월에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3월에 내놓아도 또 여전히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월에 내놓은 많은 대책들 때문에 국어 공통교과, 국어1, 국어2가 합쳐지면서 동일 교과라는 특성을 조금 뒤늦게 인지하면서 학년 말에 생기부가 500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과의 단일성을 교육부도 조금 촌촌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빨리 착오 부분을 정리해 준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창체 부분도 이수 기준을 출석으로만 했고요. 그다음에 예방지도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듯이 예방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저는 아까 모 위원님께서 교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해서 예방지도를 했다,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지도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의 학습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예방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별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한 것을 예방지도 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조금 더 노력해서 예방지도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저희 교육청은 예방지도의 수준과 가이드 라인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지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최소 성취수준이 미달되는 수준을 예측해서 기초학습을 좀 더 보완해 주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입장에서 저희도 개선해야 되고 현장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중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어서 그때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고교학점제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학년 간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격차가 또 벌어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이고, 또 실제 교원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방지도나 최소 성취 보장이 안된 학생들을 추가 보충지도를 할 때, 기초학력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최소 성취 보장을 지도할 때도 저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지도 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부가 추경을 마련하든지, 제가 봤을 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산간벽지나 소규모 학교에는 광역시 단위의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그 관점과 아예 최소 성취수준을 빼버리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지난 한 해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수차례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도 선생님이 나를 위해 정말 제대로 수

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 느꼈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못 한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이 최소 성취수준이 아니라 출결을 못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아예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면 마지막 최소 성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의 100% 가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도 기초학력 미달이 되었을 때 기초학력 미달 지도를 하면 학부모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못 받은 아이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다 챙기려고 하니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교과도 아니고 공통교과에서 선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자 하는 그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은 교육 현장이나 저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도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할 것이냐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교육 기회를 제때 수행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물 흐르듯이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올해 2학년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최소 성취 보장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대입과 다른 진로를 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제거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병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좀 더 노력하고 저희는 찾아가는 진로, 진학 컨설팅까지 학교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보장도 정말 안 되면 최소 성취 보장을 해 주는 지원단을 학교로 보내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상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많은 현장의 교원들이 환영한 것이 절대평가의 도입이었습니다. 저도 백 번 찬성합니다라는 절대평가를 했을 때 진로선택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A, B, C, 3등급으로만 하는데도 부풀리기가 많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평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평가가 정말 부풀리기 없이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균형을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이 이어지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조금 개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제도가 좋냐 나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논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제도가 작년에 시작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교원단체들이 말한 현장의 어려움이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 개선, 보완이 가능하냐가 핵심적인 논의 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 쪽에서는 여전히 개선 보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개선 보완해서 이 제도의 취지라고 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단순하게 정리했지만 과연 개선, 보완해서 갈 수 있느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개선, 보완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 용 위원님.

- (김 용 위원) 김 용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참가해서 여러 번 논의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시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압력으로 적지 않은 학교가 주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평판이 높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반면에 학교 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출석하는 것만으로 졸업으로 인정이 되고 학교 문을 나섰는데 과연 그 아이들한테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뀌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문제의식이 이 제도를 탄생시킨 큰 배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있는데 국가 수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잘 발을 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가려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교위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수립·변경(안)과 교육부 지침과 관련한 권고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을 좀 바꿔보자, 변화해 보자고 하는 틀을 만들어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변경하지 않고 종래와 같이 출석률만으로 이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뭘 바꿔보자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것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 권고사항에 있는 것처럼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아마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제안된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을 쪽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 주로 교육청이겠지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온라인 학교 운영하는 것 정도인데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1명의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권고할 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일정하게 학교에 지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권고사항 안에 포함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기존 위원님들도 계시고, 신입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나올만한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들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놓여있는 이 제도와 학교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결정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나오지 않은 견해들도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발언 안 한 분들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최은옥 위원님과 장신호 위원님은 오래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신호 위원) 잠깐 보완하는 것으로 간단한,
- (위원장) 아주 간단합니까?
- (장신호 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기초학습과 기초학력을 다지는 부분이 그렇게 임시적으로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제대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기

초학력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아까 교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교원을 채용해서 제대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교수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쓴다거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임시교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미봉책으로, 임시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기초학력이 한두 달 사이에 임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와 정부와 긴밀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정규 교원을 채용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기간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김 건 위원님.
- (김 건 위원) 사실 학생들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서 회의 끝날 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최성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 4학점짜리 과목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학점당 3시수이니까 최성보 12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성보의 이수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석률 3분의 2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시간 여기서 출석을 하면 최성보 이수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 과목이 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성보에 해당하는 하위 40%의 학업성취율을 달성한 친구들은 과연 보충지도를 들었을 때 최소 성취 기준에 올라가는 학업성취율을 보일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평가를 도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는 사실 선생님들의 정성과 열의 아니면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강은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당과 보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보장지도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수당이 그래도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지도하는 것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지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료로 최성보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성보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확실하게 수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도 계시고 차관님도 계시는데 여기 권고사항에 있는 것처럼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확약을 해 주셔야지 제가 권고사항에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두 번째로는 교원 규모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그렇고, 최성보만 해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교원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춰서 기계식으로 교원 수도 줄이고 교육 예산도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고교학점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소상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권고사항의 안전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최은옥 위원님 발언하실 때 방금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고사항을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시행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현 위원님.

- (이 현 위원) 이 현입니다. 작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미이수 문제이고, 두 번째가 최성보 문제이지요. 둘은 연관되어 있지만 미이수와 최성보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이수는 학점 이수 기준에서 발생하는 기준의 문제이고요. 최성보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지도를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이니까 서로 다른 문제인데 어쨌거나 미이수 문제, 최성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과목 선택의 폭의 늘어나니까 선생님들의 다과목 부담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로 관련된 선택이 어렵다는 문제가 고충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지역 간, 학교 간에 선택과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교육적 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 선택과목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특목고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의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일반고가 문제인 것이지요. 일반고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52%가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니 일반고에서 보편적인 교육과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면 일반고에서 보편적인 교육과정이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요. 학급이 해체되면서 아이들 교우관계 형성도 어려워지고 생활지도도 어려워진다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올라온 교육과정의 수립·변경(안)의 내용이 지금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최성보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 정도이지만 부분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고, 이 대답으로 다과목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학교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교사들의 고충, 그래서 교원 수를 늘려달라는 것에 관한 대답으로도 사실 충분치 못한 것 같고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된 과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통에 대해서도 지금 案으로는 대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역적 격차와 학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案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한 지난 전차 회의록을 보니까 오늘 나왔던 문제제기를 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천 선생님, 또 연취현 위원님께서도 졸속 수준의 미봉적인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을 제가 봤고요. 강은희 위원님과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면서도 그러나 일단 학교 현장의 안정성들을 준비해 주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로 현장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고 추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자는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온 案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학기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을 해 주지 못하면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가면 미이수 기준 그대로 다 갑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 기준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최성보는 학교 책임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결정을 못 내리고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충분치 못하고 미흡한 측면이 많지만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1단계로 시급하게 우선 문제를 봉합시킨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요청에 대한 국가교육위

원회의 답을 오늘 결정하고, 동시에 이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 차원에서 올 1학기 동안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7월 정도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앞서 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안에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떠한지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첫 번째 소위원회로 고교학점제의 종합적 대책을 위한 소위원회를 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도 의결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 현 위원님 말씀은 일단 현재 미흡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제안된 案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책을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논의 구조를 만들면서 그렇게 오늘 결정하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결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고교학점제 문제는 교육적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니깐요. 그런데 교육 가치에 대한 부인은 우리 교사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案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 수준에서 이것을 강행할 것이냐, 준비된 권고사항까지 합쳐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유예해야 될 것이냐, 정책을 실행할 당사자들은 지금 유예기간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보완해서 나가자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결국 현장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오늘 논의는 지금 이렇게

권고까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서 현장의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면서 이것을 종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이보미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더 요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우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案을 오늘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일단은 오래 기다린 위원이 최은옥 위원님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 발언 내용 중에서 교육부 측의 어떤 준비 정도나 앞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수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많은 짐이 가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최은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은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내용 중에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저희가 오늘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린 이 내용은 고교학점제 관련된 것에 국한해서 우선은 자료에 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에 넘어오기 이전에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하는 것을 국정과제로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정책에 굉장히 역점을 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둔 다든지 책임교사제를 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그리고 아까 연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영어, 기초수학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초·중·고에서 저희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흡한 채로 고교에 올라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고교 영어, 고교 수학을 이수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초영어, 기초수학 이런 과목을 저희가 개설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읍면지역의 강사는 사실 전문성 있는 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선은 임시방편일 수는 있지만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 교육부에서 그냥 이것을 탁상공론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시·도와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오늘 자료에 담은 것입니다.
- 그리고 아까 김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늘 위원회 案으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장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원 문제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 외에서는 교원 정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이런 논의와 압력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7월에 왔는데 이미 굉장히 2026년도 교원 정원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렇지만 그 대세가 있음에도 제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원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또 교육감님들도 노력을 해주셔서 한 700명 넘는 교원 정원을 별도 확보해서 이 고교학점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금 아직도 발언 안 하신 위원들이 계시는데 네 분이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 반상진 위원님.
- (반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정책 설계가 시작된 것이 6년 전에 했지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교위에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느냐, 폐기시키느냐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손덕제 위원이라든지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진행을 하되 교육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또 국교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상시 점검체제를 통해서 오늘 이런 쟁점에 대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적시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회의록에 남기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조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보자는 아이টে으로 적시해 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슬기 위원님.
- (이슬기 위원) 저는 개별적인 정책안에 대한 말씀보다는 조금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논의를 할 때 학생이나 교원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맞춤형과 선택형 교육이라는 전제 자체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학생 개개인이 모두 만족할 정도로 맞춤과 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인지, 교육은 개별의 성장 이상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최정보’라는 단어 자체도 학생이 어떤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것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방점이지 어떤 수준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선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역할로 포털을 만든다든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덕제 위원)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1안과 2안을 냈는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1안에 대한 내용만 알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하나만 낸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1안과 2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案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2안의 요지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2안이었습니다. 교육부 2안이었는데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트랙을 4개를 개설해서 진행한 결과, 1안에 가까운 내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단순히 1안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충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라서 우리가 논의에 부칠 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案을 지금 올린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윤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합시다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근본적인 방향으로 다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 작년 1년 동안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다 500자로 적어놓았던 것도 작년 2학기에 250자로 줄여서 다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검토를 하려면 고시 전에 이런 얘기가 되어서 고시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 얘기하시고 지금 초·중등에서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본질과는 조금 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부가 1안으로 되었을 때 이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학교 교류 추진, 강사 채용,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대해 여기서 의결하고 나면 바로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수 있는 검토 자료를 완벽히 가지고 있는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상태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이제 추진이 되어도 이것이 예고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의 상황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5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다, 또 학생들의 예방지도, 보충지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은 처음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 부담은 줄일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1안으로 해서 나왔을 때 저는 바로 여기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 (윤건영 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 정도 준비가 되고 그런 정도 얘기가 되면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하는데 제 입장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출석률만을 가지고 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1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 다만, 1안으로 갔을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차선택이지 최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더 검토해야 되고, 사실 제가 교육감 된지 3년 반 되었는데 저는 작년 8월에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갔더니 한 선생님이 이 얘기를 꺼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2시간 반 동안 논쟁을 하고 제가 돌아와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쫓 추적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7년 동안 계속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계속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아니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면서 보완책을 만든 상태에서 전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는 들으면서 대안은 주지 않고 전면 시행을 한 것이 저는 사달 난 것이라고 봅니다.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그러면, 논·서술로 간다고 그러면 이미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로 갔을 때, 논·서술로 갔을 때 선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제도의 변화가 전제가 될 때 꼭 필수적인 것은 사전에 조건을 갖추고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을 보면 개혁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가려면 우선은 안 되어도 몇 년 후에 절대평가로 가겠다, 그러면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지금 조금은 어렵지만 끌고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너무 부족해서 차관님이 지금 답변하신다니까 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뜻이 잘 전달된 것 같고 말씀 감사합니다. 최은옥 위원님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오봉 위원님과 유민봉 위원님, 두 분이 안 하셨는데요. 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양오봉 위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의 걱정을 사실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들어봤는데 사실 대학도 지금 똑같은 입장 같습니다. AI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이런 변화에 지금 대학도 굉장한 혁신을 하고 있고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요. 교육부가 지금 그런 고민의 흔적으로 1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권고안이 보완을 하기 위한 많은 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학도 지금 온라인 교육이나 AI 교육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도 온라인으로 석·박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시스템을 안 바꿀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실정의 대학도 있고, 그런데 대학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안 변하고 대학에 그대로 와서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부가 낸 案을 일단은 시행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좀 더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실 대학도 지금 정시가 끝나게 되면 바로 사전교육에 들어갑니다. 수준별 학습을 해서 수학, 물리, 화학, 이 분야의 사전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저희가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

히 효과가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고요. 그래서 굉장한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우리가 사전 온라인 교육도 있고 방학 때 또 온라인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학습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레벨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대학은 전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도 거기에 맞춰서 학업성취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 온라인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냥 25분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분 강의하고 그 학생이 어떤 책을 읽고, 또 그런 것을 거치게 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다시 진행하는 이런 굉장히 선진화된 온라인 교육이 좋게 지금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고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 유민봉 위원님 발언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종합 정리해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 회 후 속 개)

- (위원장) 한 분이 착석을 안 했지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유민봉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의견을 여쭙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민봉 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이다 보니까 논의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수렴시켜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학교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을 제공했다면 고교학점제는 등급을 학점으로 준다는 그 의미 이상

으로 사실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범운영도 2년인가 했고요. 제도를 다지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한 3년 정도 거쳤고, 그리고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서로들 다릅니다. 교사는 교사의 관점에서, 학부모는 이 고교학점제가 대입과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논의는 논의의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평가 방식이나 대입 시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과제로 요청한 것이 그 부분이고, 그동안 논의도 그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의는 그 범위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그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스물한 분이 계시는데 스물한 분의 의견이 전혀 같을 수 없지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여기서 모두 발언하고 그 공통점을 찾는다면 정책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모니터링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 4개 기관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상당히 공통점으로 수렴되어 갑니다. 그것이 우선 이수 기준에서는 출석과 학업성취율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반영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준 것이지요.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가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간에 약간의 차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 4개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 일단 공통과목은 학점 이수 기준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이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는 쪽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이외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오늘 교육부에서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 및 추진 현황을 보고했는데 그런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고 당연히 주어진 발언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이들 기관의 의견도 우리가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개혁적 정책의 어떤 일관성과 신뢰성과 안정성이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완이라는 것은 개혁성, 일관성, 신뢰성, 안정성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디 조그만 단체의 결정이 아니고 국가의 결정이고, 국가에서 이미 방향성을 정한 것이고 그 방향성은 옳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존의 정책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원래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그 취지와 가치와 철학이 지켜져야 된다, 물론 철학으로 들어가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논의의 범위는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4개 기관에서 공통의 의견으로 낸 이수 기준에서의 유연성, 그리고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의 확실하고 책임성 있는 향후 조치,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은옥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 (최은옥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 들겠습니다.
- (최은옥 위원)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두 가지라

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개선 대책을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린 자료는 9월에 발표를 한 자료이고요. 오늘 권고를 해주시면 이 9월에 발표한 자료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까지 다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이 달 안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또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가 수년간의 시범운영까지 거쳐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도 고교학점제의 제도 도입 자체가 수년간 논의가 되었고 시범운영도 몇 년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최소 성취수준 자체를 적용하는 것을 시범기간에는 하지 않았고요. 25년에 적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절대평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국교위가 논의해서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보미 위원)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보미 위원님.

- (이보미 위원) 아까 대학 교육과 비교해서 고교학점제를 설명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대학과 고등학교는 다른 것이 대학은 일정 수준을 통과한 학생들이 가서 과목을 선택하는 개념이고, 고등학교는 그런 것 없이 진학의 개념으로 이렇게 온 학생들이는데 사실상 최성보를 운영하더라도 미이수되고 유급되는 학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계속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만으로 졸업장을 받고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갔던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책임 있게 못해서 유급이 나오고 졸업을 못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우려스럽고요.

- 그리고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에 시도교육청이 3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골 학교에 과목을 못 듣는 학생들이 이미 그냥 온라인으로 과목 좀 더 듣는 그런 수준이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할 정도의 어떤 인프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3월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학교의 몫으로 온전히 들어갈 것이고, 혼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진통들을 다 고려하셔서 판
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가 책임교육이라
는 것에 굉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급 없이 졸
업장을 출석으로 주던 나라에서 이제는 유급이 많아질 수 있는 이
런 상황에 대해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온전히 그 부담을 안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잘 인지해 주셔서 같이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학교에 온전히 이 부분을 한다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
한 사회적 충격이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들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
겠습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 (박영환 위원) 많은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저 또한 대학교와 고등
학교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답
답했던 것은 이수, 미이수와 보충지도를 계속 연결시켜서 얘기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금 대단히 많은 한계와 오
류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뒤섞여서 논의가 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뒤섞어서 지금 논의했을 때 나타날 우려들은 충
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40%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40% 만들
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인 어떤 검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건상으로 한정지어서 형
식적인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
일 결정하게 된다면 차후에 현장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불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보충지도와 이수 제도를 결합시
키는 이런 방식은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과 교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출석률만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각 교급별로, 어떤 위원님께서서는 진짜 태교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초·중·고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그 교급에 맞게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누적되어 왔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학교 공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져야 될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도 있지만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실질적인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하고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 지든 간에 전수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 방식이 표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정되는 것은 따르겠지만 이런 의견은 반드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의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손덕제 위원님께서 또 명패를 드셨네요.
- (손덕제 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만 전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문자를 보니까 엄청 쏟아졌더라고요. 그중에 좀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수당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 선생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이때까지 잘 되어 온 이유는 출석률로 이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업일수로만 졸업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되고 최성보가 들어 오면서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 혼란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밀고 나간다면 현장에서는 다시 그런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

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원단체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국교위 차원의 확인 결과로는 사실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과장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교원들의 문제제기라든지 개선 요구가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지 수당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의제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한 발언이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안건에 대해 아까 박영환 위원님께서 합의 또는 표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합의를 한다면 교원단체 측에서 어떤 조건, 전제 하에 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여쭙 봐야 되겠습니다. 전제나 유보나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영환 위원)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도입된,
- (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면 오늘 이 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기존 고교학점제도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 제도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案에 대해서 일단 합의하되 어떤 유보나 전제를 달면서 찬성하실 수 있는지 그런 합의를 시도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정리해서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 (박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15쪽에 있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한 것과 권고사항이 지금 붙어있는 것이 한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조건에서 오늘 1월 15일에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기존의 案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수립·변경(안)의 차항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을 같이 붙여서 이것을 수정안, 예를 들면 지금 마음은 권고사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삭제해서 교육부에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국교위의 案이 마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지고요. 저는 이것을 삭제하고 간다면 합의할 수 있다는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교위에 판단을 요청한 사항은 바로 권고사항에 있는 교육부 지침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인데 이것이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육과정에 담는 것이 적절하냐는 어떤 형식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조금 넓게 표현을 하고 교육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논의 끝에 이렇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교위가 교육부 요청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 (손덕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권고안이 만들어질 때 제가 2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이것이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취합해서 한 것이니까 그냥 이대로 보고를 받고 예고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모니터링단이나 특별위원회는 국교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때 자문을 하는 역할인데, 이것이 권고만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갈 때 국교위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나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금 네 기구의 사전 논의는 국교위에 보고되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고사항과 같은 案이 나온 것입니다. 국교위로서는 그 案을 전제로 논의에 부치고 행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논의의 과정을 다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오늘 말하자면 교육부의 2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가지고 가부를 묻는 수밖에 없는, 물론 세부적인 수정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案을 내서 선택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보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요. 권고사항에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최성보 운영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사실 현장은 모르겠고, 준비가 될 때까지만 유예하는 案도 권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될 때까지 어떻게요?
- (이보미 위원) 유예하는 방안이요.
- (위원장) 지금 판단을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 (이보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둘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반영하는 것이 지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에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案이잖아요. 그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둘 다 반영할 수도 있고 하나만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고를 할 때는 그러면 유예 후 최성보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유예하는 방안을 권고하실 수는 없나요?
- (위원장) 당장 3월 1일부터 권고사항의 교육부 지침안을 확정해야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학교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유예할 수가 없습니다.
- (손덕제 위원) 행정예고안은 그대로 가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출석률로만 해서 지금 현재 체제대로 3년 정도를 가고 3년 뒤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을 적용시키고,
- (이보미 위원) 하나 이상이니까 완충을 하자는 말씀인데...

- (손덕제 위원) 예. 완충을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본위원회에서는 무슨 결정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국교위가 본위원회에 보고해 가면서 진행한 4개의 회의 트랙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한 수준으로 깊이 논의해서 정리한 것이 교육부 권고사항 지침안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案을 지금 내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이 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 현 위원님.
- (이 현 위원) 오늘 의제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결론들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15페이지에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운영 기준 수립·변경(안)이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을 쪽 들어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1안으로 두고 여기서 결정을 하나 하고요.
- 두 번째로는 권고사항에 의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 중에서도 첫 번째 핵심은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권고에 대해서 교원단체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론의 우리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찬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나 하고, 2안은 권고사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결정을 하나 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었던 것인데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 직속으로 1학기 동안 진행될 고교 학점제 이후에 안정성이나 안착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7월 정도에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이 어떤 소위원회가 되었든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결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일단 한 분만 더 듣고 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案은 명확하게 두 가지 案입니다. 그래서 1안, 2안이 있었고 그 1안, 2안에 대해 4개의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1안입니다. 다만, 그 1안을 교육과정 총론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 案을 수정한 것이 수립·변경(안)으로 나온 것이고, 이 案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권고안이 같이 간다, 이것이란 세트의 의견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그다음에 이 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기 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저는 매우 전문성과 부수적 연구가 사실은 굉장한 수준으로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는 그런 나머지 부분들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소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또 다시 해야지 이 고교학점제가 초기 도입 단계에서 나왔던 문제, 앞으로 발전적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를 의결하고 일부 위원들 해서 하면 여러 가지, 그리고 7월까지라고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모습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교 교육과정에 다 담을 내용을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으로 나눠놓은 것이고 한 세트인 것이 사실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결정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된 취지는 하나의 세트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논의를 할 것인

데 아니면 한 세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 그리고 사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 차원에서 결정해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가 단일한 책임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완 대책도 교육부가 마련해야 되고, 일단 이 자리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자리에서 하신 앞으로의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교원단체들의 개선 요구 등등을 반영해 가면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 교육제도를 계속 논의를 합니다. 이미 고교교육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대입제도 특별위원회에서도 고교 이수 방식이나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고 그렇게 다루어진 것을 고교학점제 차원에서 본위원회가 또 살피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 특별히 성과를 내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동안의 논의를 전체 총괄해서 제안한 전체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찬반 의견을 말씀하시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안은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기존의 案이나 수립·변경(안)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권고사항은 실행할 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행 부서에서 이것을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은 우리가 권고를 하되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앞의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뒤의 권고사항은 그냥 권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우리가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 (김주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이것이 실행이 잘 안 될 때 교육위원회에서 실행 부서한테 좀 더 실행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개선하든가 하는 그 소통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위원장) 권고사항 중에 교육부 지침사항은 교육부가 교육과정 성격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사실상 교육과정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규범력이 있고요. 판단을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 사항도 그 지침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것을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우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충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건이나 전제나 일정은 유보를 하면서 만장일치 표결을 시도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원단체 측에서는 권고사항, 교육부 지침, 학업성취율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제시기 때문에 결국 표결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가 오늘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쪽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방향이고요. 또 한쪽은 이 개선과 보완 노력이라는 것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현장에 부담만 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의 견해 대립이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상당한 답변을 주신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표결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 (손덕제 위원) 그런데 어떤 案을 어떻게 표결을...
- (위원장) 지금 표결은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안 말씀 있습니다.
- (위원장) 예.
- (박영환 위원) 저는 아까 이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설사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1, 2안을 보내서 판단을 요구했을 때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사항은 16쪽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내릴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은 저는 15쪽에 있는 수립·변경(안)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 내용과 결정 내릴 수 없는 것과 수립·변경(안)을 같이 결합시켜서 지금 표결을 시도해 버리면 저는 현 단계에서는 15쪽에 있는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기존의 案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15쪽은 별도로 결정하되 16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결정해도 안 해도 결국 교육부는 교육부가 결정할 몫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교육부 차관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 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의견 분포나 이런 것들은 다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의견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결부시켜서 마치 거꾸로 권고사항 案을 이렇게 낼 것이기 때문에 15쪽에 있는 수립·변경(안)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의 것을 지금 결합시켜놓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하게 되었을 때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대하게 되어서 만약 부결이 나면 15쪽에 있는 내용까지 다 걷어차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고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논의의 여지를 대단히 좁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리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설명들은 다 생략하고 결정 방식에 국한해서 좋은 지혜들을 짧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박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논의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고교학점제 실행 상에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어떻게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할 것인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변경할 것인가의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案을 전부 다 교육과정 총론에 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추상적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상화하는 案이 수립·변경(안)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권고사항이 붙은 것이어서 지금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라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변경(안)으로 넣었어야 된다는 취지라서 지금 논의를 나눠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논의 과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우리 국교위 차원에서도 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권고안과 행정예고안으로 나뉜 것이지 이것이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5페이지만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 과정과는 배치된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정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박영환 위원님 말씀 중에 수립·변경(안)과 교육부 지침안, 권고사항, 그것을 한쪽은 찬성할 수 있는데 한쪽은 반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시고요.

- 두 번째로 교육부 지침안은 국교위의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형적인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국교위의 판단사항이라고 해서 판단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을 해야 되고요. 교육부 지침과 다른 후속조치는 교육부 지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조치로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상 규범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과 후속조치는 같이 한 묶음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영환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분리해서 하나하나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실질적으로는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립·변경(안)과 그 뒤에 있는 교육부 지침안은 우리 논의기구들의 논의에서는 사실상 한 묶음이었습니다. 묶음이었는데 교육과정에 너무 구체적인 案이 들어가면 너무 경성화된다는, 규범의 경성화, 연성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경성화되는 것은 '앞으로도 또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할지도 모르는데 교육과정을 그때마다 변경한다는 말이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침안에 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분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묶음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결정 방식은 분리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결 방식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서 정리할까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손덕제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 이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교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사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뭔가라고 나온 굉장히 소중한 문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것을 먼저 하면 우리 박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권고안에 대한 토론을 지난번에 나온 1안과 2안, 조금 전에 이보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유예, 3개 정도로 나눠서 빨리 결정을 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만약에 분리해서 한다면 수립·변경(안)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물어서 결정하고요. 권고사항(안)은 16페이지에 있는 자료 교육부 지침과 후속조치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라서 그 전체의 찬반을 물을 텐데 반대의 의견은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 중 학업성취율을 빼는 의견이지요. 그것이 핵심이지요.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찬성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취지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가서 물어서 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해 다 하셨지요?

- (김주성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교육부 지침은 교육과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위원장) 교육부 지침은 교육과정에 적히지는 않고 교육부에서 국교위의 판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국교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서로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교육부 지침사항을 교육과정에 의한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판단을 요청한 사항인데 형식을 교육과정에 담지 않고 지침에 담는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교육과정 성격을 띤 지침이지요.
- (김주성 위원)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에 올라가야지요. 안 올라갔으면 지침은 지침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 (위원장)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권고사항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교육과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실행 부서한테 이것을 실행할 때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과연 권고사항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토론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논의를 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판단은 규범력이 있습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교육부가 당초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던 案은 아주 간단합니다. 1안은 최소 성취수준을 넣는다, 2안은 출석일수만 한다, 이것이 총론에 학업성취 또는 출결, 여기 ‘또는’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온 겁니다. 총론에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것은 교육부 지침으로 한다고 했으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오지도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4개 기관에서 이 논의를 할 때 분명히 최소 성취 보장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나 출결 확인이 교육과정 총론으로 담기에 앞으로 봐서도 ‘그러면 교육과정 총론을 매번 고쳐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이지 ‘교육과정 총론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분명히 교육과정 총론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학업성취, 출결, 이 자체를 담지 않아야 될 부분이냐, 이런 논의까지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과정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분명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에 대한 논의를 했고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미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하느냐,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하느냐, 그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한 안건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함께하는 것이 저는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요. 지난번 논의에서도 계속 그 논의를 이어왔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궁금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 문장이지만 왜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항을 국가교육과정에 바로 담지 않고 이렇게 일반론 하나, 둘 중에 하나 이상으로 담고 권고사항은 교육부 지침으로 했는지 그 논의 과정에 대해 우리가 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 (보고자A) 교육부에서 1안과 2안을 요청하신 것은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안과 2안 중에서 단순히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측면, 그리고 실행의 측면, 다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그리고 고교 특위, 그리고 관련 연구진이 함께 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전체 문서 형식과의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유연성,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되어서 교육과정에는 이 정도로 진술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다만, 교육부의 요청에 대해서 국교위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회신을 하고 그것이 그다음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개정안과 권고사항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앞단의 논의에서 다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강은희 위원) 제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인데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까지도 안왔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일부는 아주 원론적인 것만 수립·변경(안)에 담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판단을 요청한 지침안을 교육

부 지침으로 담고, 교육부 지침으로 담으면서 단순히 교육부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후속조치에 담은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일을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하나만 선택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논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 사항을 전부 담은 것입니다.

- 그러면 수립·변경(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고 권고사항(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서 표결 방식은 투표도 있고 거수도 있는데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저를 포함해서 전원,

- (이슬기 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案으로 올라온 것을 분리하려면 분리하는 것을 案으로 삼고 나서 표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분리하기로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 (이슬기 위원) 예.

- (위원장) 그러면 전원일치 찬성입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만 찬성을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저도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권고사항(안)입니다. 권고사항(안)은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처럼 교육부 지침과 후속조치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교육부 지침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기구들의 논의를 모아서 후속조치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문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기 우리가 결정하는 案에 보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의 것은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이미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앞에 교육부장관이 정한,
- (위원장) 그 지침사항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 (양오봉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 지침에 지금 담겨있는 案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답을 해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앞의 것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이 지침이라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리,
- (위원장) 교육부 지침을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지침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지침안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

육부 지침을 우리가 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에 담지 않고 교육부 지침에 담는 것입니다.

- (이 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예.
- (이 현 위원) 일단 지금 1안은 다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 (위원장) 예.
- (이 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권고사항에 대해서 찬반 표결 들어가기 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국가교육과정이 현재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고 현재 현장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案을 보완해서 보완책으로 던지는 것인데 이 보완책 자체도 현재 수준이 부족하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다, 이런 식이고요. 특히나 여기 교원단체 대표들께서 와 계신데 지금까지 발언하신 것으로 볼 때 교원단체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案에 찬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미진한 부분이 있고 3개의 교원단체 모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에 이 논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분들한테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소위원회 얘기했던 것은 운영 규칙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얘기를 드린 것인데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장치를 주면 교원단체에서도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논의해 볼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겠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의 의결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사진행발언인데 권고사항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가령 찬성하는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말씀하

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 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것을 찬성하면 교원단체 측에서는 이것이 현장에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案이지 않습니까, 그 노력한 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표결할 수는 있습니다.
- (손덕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번에 권고안이 나올 때 그때 사실 1안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 국교위 위원들의 의견이 논의된 권고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나 의논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고안의 내용을 그냥 찬반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案 또는 출석률만 하는 것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충안으로 해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보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만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행기간을 어느 정도로 유예하기를 권고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출석률로 해 온 것처럼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 3년 정도 지내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기초학력에 대해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채우고 그 뒤에는 이 案대로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현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지금 논의를 한없이 해서 그 경우의 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찬반을 물어서 이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찬성하는 경우에 조건을 좀 붙이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추가적인 노력,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노력들을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은 논의해서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 案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반대는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면 학업성취율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案에 대한 반대의 핵심 논의가 그것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율을

지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형해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요소를 교육적 차원에서 살려나가야 된다, 비로소 학교가 최소 성취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교육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현재 이렇게 시작하고 계속 보완 노력을 해 나가자는 것이 권고사항(안)입니다. 보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 만약에 이 案에 대해서 반대가 우세하면 학업성취율을 그냥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고교학점제가 한 해의 실험으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은 국가 차원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모양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중요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제도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찬반의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찬성은 원안에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는 조건을 하나 붙여서 통과하는 것이고, 반대는 학업성취율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이 제도가 급격히 형해화된다면 그럴까,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손덕제 위원) 그래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교원단체의 세 분이 이렇게 계시지만 출석률만 하는 것을 배제하고 지금 다 같이 찬성 의견으로 가되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의 시간을 둔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당장 3월 1일부터 어떤 제도를 시행하느냐를 지금 결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예를 할 수가 없고 당장 장기적인 보완을 해 나가더라도 당장 닥친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학생들이 어떤 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게 되느냐를 지금 결정해 줘서 교육 현장이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정성 차원입니다. 일단 그것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보완 노력은 빠를수록 좋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문안 문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서 거론이 된 것인데 여기 원안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 지침이거든요. 이 교육부 지침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관의 지침이면 장관이 결정을 해야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주는 지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시행에 관한 지침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히려 실행기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걸려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지침은 교육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주는 시행 지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시행 지침까지 내려야 되느냐는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지금 결정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 이 형식에 대해서는 교육부와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 (김주성 위원) 협의가 되셨지만 지금 이 문안에 보게 되면 여기는 교육부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 교육부 지침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해준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 (위원장) 위원님,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립·변경(안)에,
- (김주성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앞의 것과 이것이 상충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교육부장관 지침에 따른다고 했으면 장관의 지침이니까 우리는 이미 결정을 해 준 것이지요. 장관이 지침을 내리면 된다, 앞의 원안에 나와 있으니깐요.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고 시행은 그쪽에서 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갈라지는데 만약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시행 부서에 정책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위원장님한테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 (이 현 위원)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희가 교육부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시는데 그 지침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입니다. 지침을 줄 때 이런 것을 참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 (이 현 위원)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권고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이 지침을 주실 때 이러면 좋겠다는 권고, 두 번째는 후속조치를 하실 때 이러면 좋겠다는 권고이므로 지침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도 권고로 가야지요. 둘 다 권고로 가야지요.
- (이 현 위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안)에 1번, 2번 권고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 (김주성 위원) 그렇지요. 권고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권고를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관은 시행 부서이고, 중장기 계획을 짜는 책임을 맡은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행지침을 준다는 것은 너무 책임도 커지고, 또 그것이 위원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정리되어야 이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판단을 요청한 사항인데 요청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전혀 걱정 안 하시는 형식은 교육과정에 다 담는 것입니다. 우리 권한입니다. 그렇게 해결해도 되는데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너무 길게 담는 것이 형식상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있고요. 부 지침에 있고요. 그 교육부 지침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권고하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여기 16쪽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한테 요청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을 정하는 것도 하고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달라고 교육부가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15쪽에 있는 것은 그 지침을 주려면 국가교육과정에 일부 개정사항이 필요하겠다는 싶어서 국가교육과정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고, 개정 권한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쪽의 지침은 교육부가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교육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시행하면서 어려우면 자꾸 위원장님한테 지침 받아 가고서 우리 위원장님이 다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한 것이라고 책임을 이쪽으로 미루면,

- (위원장) 교육부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가셔서 다 답변하셔야 된다고요.
- (최은옥 위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위원장) 교육부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일단 현재,
- (김주성 위원) 아니, 안 하실 것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 (위원장)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에 담아서 교육부의 지침안으로 판단하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형식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권고사항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지금 연취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모시고 와야겠네요. 지금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옷이 다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오셔야 됩니다.
- (유민봉 위원)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예.
- (유민봉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사실 권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국교위에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육부는 독임 장관제이고 우리 교육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원회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봤지만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수렴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조치안이고 권고사항이더라도 그만큼 사회적 신뢰도와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

약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교육부가 조치로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교육부는 저희들이 지금 이 많은 시간,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검토해서 의견을 낸 것을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교위가 다양한 의견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수렴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표도 잘 안 했었고요.

- 그래서 지금 시간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가능하시다면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몇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상임위원님 두 분과 그 몇 분과 이 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달리해서 권고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한 10분이나 15분이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결론이 안 난다면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과정의 정당성을 훨씬 더 확보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권고의 의미를 유민봉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권고사항을 의결하면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답을 해 주시지요.
- (최은옥 위원)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시간의 숙고를 거쳐서 결정해 주신 만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되었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을 보충해서 하는 문제는 좀 쉽지 않은 것이 근본적으로 반대 측은 학업성취율 삭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권고사항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후속조치와 지침안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현 위원님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찬성의 경우에 어떤 것을 좀 보완해서 찬반을 물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까?
- (이 현 위원) 의사결정이 3개가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앞에

있었던 총론 편성 기준 변경(안)은 결정했구요. 두 번째는 권고사항을 의결하는 것이고요. 3번에다 국교위에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제가 이 권고(안)을 찬성하는데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교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대로 표결로 결정을 하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아직 현장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결정하시는 데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안에다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후에 종합적 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의결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위원장) 그러면 권고사항(안)은 이대로,
- (강은희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더 하려고 하면 저는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시작을 할까요?
- (이 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 (강은희 위원) 정말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짚어서 이 문제를 완성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짚으려고 하면 정말,
- (이 현 위원) 아니, 짚는 데 취지가 있는 것보다 유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강은희 위원) 제가 교육감으로서 이 부족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가 사실은 매우 불편하기도 합니다.
- (이 현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강은희 위원)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펼치는 교육감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있고, 또 여기 교육부의 권고안

1, 2도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문제가 없고 모두가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 현장에서 3월에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서 점차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 (위원장)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현 위원님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국교위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와 대입제도 특별위원회에서 고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논의가 올라오기 전에는 뭔가 설득력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원안이 찬성이 되었을 때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교류가 서로 있습니다. 제안이 있고 요청이 있고 또 설명이 있고 다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은 무수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맡겨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 국교위는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까 두 위원회를 만들어두었으니 두 위원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충실하게 한다는 조건을 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당연히 이 결정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후속적인 노력들을 각 기관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원안 그대로 찬반을 묻고 만약에 혹시 찬성이 다수가 되지 않으면 학업성취율은 삭제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권고사항(안)은 교육부 지침안과 후속조치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정에서 기권은 반대와 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결과에서 기권은 반대와 같이 취급됩니다.

- (보고자A) 열두 분 찬성하셨습니다.
- (위원장) 가결을 위한 표는 되었고요. 반대 의사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반대 의사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기권으로...

표결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 (보고자A)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명 재적에 19인이 참석하셨고요. 찬성 열두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한 분입니다.
- (위원장) 안건에 대한 표결을 마쳤습니다. 의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오랜 과정을 거쳐 왔고 국민들께서 궁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학년도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첫 해였습니다. 정책 시행 첫 해에 국가교육과정의 변경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작년 9월 26일부터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변경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와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논의를 이어왔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오늘 국가교육위원회는 세 가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 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둘째, 학점 이수 기준 중 학업성취율 반영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을 권고하고, 셋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자율사항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과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안전명,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주문,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및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안전과 같이 의결한다.

(의 사 봉 3 타)

이상입니다.

나. (심의·의결안전)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 (간사) 이어서 2호 안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안전 이해를 돕고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성열관 위원장님, 정책연구에 참여하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형미 본부장님, 이경언 연구위원님, 천안 오송초 박세원 선생님께서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

련부서에서는 김한승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님, 구본익 체육예술
교육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주재 관련해서 여기 장소는 저희가 대관한 곳이라서 공식
적으로는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호 안전을 빠르게 심
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A) 안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등에 대하여 24년 4월 29차 회의에서
개정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24년 7월 32차 회의에서 개정계획
을 의결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1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5년 7월 57차 회의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고 교과명과 시
수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최신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에 따라 연구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교육과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안 개발에 노
력하였고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자문과 사전검토의 역할을 개
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행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
관 협의 등도 실시하고 실시간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63차 회의에서 행정예고(안)을 보고드린 후 행정예고를 20
일간 실시하고 결과는 붙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32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보고드립니다. 별책으로
해당 내용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총
론 초등학교 1, 2학년 편제에 건강한 생활 통합교과 신설은 144
차시 시수 배당이 되고, 예술활동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은
256차시로 배당됩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는 건강한 생활
120차시, 즐거운 생활 200차시 시수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번 개정의 적용 일정을 2028학년 1, 2학년 적용 시행으로 하고
그전에 교육과정 후속조치, 현장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은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한 생활은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이며, 기존 통합교과 체계와
연계하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즐거운 생활은 예술활동 경험

중심 통합교과로 개발하였습니다.

- 다음은 33쪽입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은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데 유의하였습니다.
- 이제 권고사항(안)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개정(안)과 함께 역시 전문위, 모니터링단, 연구진 논의를 종합하여 마련되었고, 이 역시 행정예고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릴 바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권고사항(안),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현장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국교위 의결 단계와 연구 및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주이고, 전담교사 교원 배치,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등 여건 개선, 교원 연수, 학습 자료 지원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34쪽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 행정예고 의견 제출 현황과 검토 결과(안)입니다. 1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내용의 중복 등이 있어 유목화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반면 기존 초등학교 통합교과와의 연계성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등학교 통합교과로 개발하면서 교과 신설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과 간 연계방안과 이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교육 교육과정 건강한 생활 수업시간에 탄력적 운영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시는 내용도 있는데 총론에 수업시간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교수학습 방법에는 그 운영방법의 예가 안내된 사항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대한 의견은 본 개정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위 사전검토, 모니터링단의 의견 제출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문위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자B) 한국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너무 적다고 하는 문제

의식에 있어서 기존에 즐거운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분리되면 더 내실화되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과 이름을 '건강한 생활'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수는 기존대로 144시간이 좋겠다, 그리고 책상에 놓여있는 것처럼 개발진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면 저희가 수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당초에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한 결정에 상당히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모니터링단 의견 듣겠습니다.
- (보고자C)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입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8쪽입니다. 모니터링단은 건강한 생활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추가 권고사항으로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연수와 전담교사의 배치, 그리고 공간 및 시설 지원, 교수학습 평가 자료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과장님과 보고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래 논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안전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일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주문,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

육과정 수립·변경 및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안전과 같이 의결한다.

(의 사 봉 3 타)

다. (심의·의결안전)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

- (간사) 다음으로 심의·의결안전인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에 대해 숙의공론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가 2023년 6월에 발족해서 2년간의 활동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로 국참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논의와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의 기본적인 법령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국민 의견수렴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5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교위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와 추천 방식으로 지원하되 공모는 6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평가입니다.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총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약 75%, 그다음에 추천을 통해 25%로 구성하였습니다. 숙의·토론 중심으로 17회 활동을 진행하였고 세부활동 내역은 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주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국민 의견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역·연령·성별·직능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단순한 토의가 아니라 사전교육 후 숙의·토론을 진행하는 등 국민의 숙의 역량을 높이고 깊이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계로는 유사한 숙의 방식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활동의 부재, 논의 결과 환류가 좀 미흡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청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모집 단계에서 신청도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는 숙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분과 활동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참여율을 제고하고 학생·청년의 참여도 보다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47페이지입니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기본 방향은 먼저 법령상 최대 인원인 500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역·연령·성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학생·청년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와 다르게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연임 및 공개모집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의 추천을 10%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1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국민참여위원의 연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모집 절차 및 방법입니다. 연임 같은 경우는 1기 위원회 활동 참여율이 적극적으로 50% 이상이었던 위원님 대상으로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은 499명 중 연임과 추천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하고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 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추천 같은 경우는 총 51명으로 교육감님께 34명, 시도지사님께 17명을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 운영 및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교육 의제와 국민참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의제를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의제별로 숙의 방법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설계하고 다양한 숙의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혹은 직능 등 분과 단위 활동을 통해서 참

여 효능감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교육정책과 숙의·토론 역량 제고를 위해서 참여위원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요. 특히 방학 동안에는 학생·청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는 국민참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와 이후 진행 및 논의 과정을 국민참여위원회에 공유해서 환류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보와 같은 경우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활동 전반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고시 개정은 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2기의 원활한 모집 및 운영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기에서 처음 연임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임 모집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1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 절차입니다. 기존 1기에서는 2배수 추천을 했는데 1배수 추천하고 교육감님 등 시도지사님의 추천을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원 충원입니다. 만약 해촉으로 국민참여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원 충원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다시 공개모집이나 추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된 이후에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을 4월까지 진행하고 발대식을 5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기 국민참여위원회 대비 2기 국민참여위원회의 주요 변경사항은 별지 자료로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 (김 건 위원) 국민참여위원 모집을 3월 초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면 언제쯤 모집을 개시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위원장은 어떤 분이 맡으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저것이 울려서 정확하게 잘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건 위원)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을 3월 초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시면 언제쯤 개시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보고자가 설명하시지요.
- (보고자)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은 2월 중순경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홍보계획에도 넣었듯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 위원님들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연취현 위원님.
- (연취현 위원) 5조 3항 인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이 고시가 2배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께서 그중에 일부 균형 있게 선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을 축소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굳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제가 알고 싶고요. 저는 교육감님 추천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참여위원회에 넣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규정을 어떤 형태로든 남겨놓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번 제도를 개선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참여율이 일반인 모집이 훨씬 높고요. 교육감님과 시도지사님 추천하신 분들의 참석률이 낮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고요. 참석률이 낮

은 분들을 또 2배수까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보충적인 설명은 보고자가 간단하게 하시지요.

- (보고자) 연취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개 때는 추천 인원수가 많았고 또 2배수 추천을 하다 보니까 당초 지역·연령·성별·직능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 과정에서도 심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적격성을 심사하기보다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심사가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2기 때는 추천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연령·성별·직능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런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고려해서 판단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광호 상임위원님.
- (이광호 상임위원) 저도 이제 막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면 원래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선정하는 분과 지역에서 추천하는 분의 적정 비율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1기 경험을 해 보니까 지역 추천 비율을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지역 교육감이 추천하는 몫을 일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청년·학생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줄인다면 지자체나 지역에 추천하는 분 중에서 차라리 그 조항을 청년·학생 중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약간 그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 골고루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겠습니까? 오늘 의결을 해야 됩니다.
- (보고자)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시도교육감님과 시도지사님이 추천하시는 분은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지금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반상진 위원님.
- (반상진 위원) 고시되는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국참위의 구성·운영 개선에 대한 추가 내용을 나중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국교위이기 때문에 국참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1기에서는 국참위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숙의과정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처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나중에 마련해 주시고요.
- 또 하나가 고시를 나중에 한다면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되겠지만 국참위원을 5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명이 지역·성별·연령 이런 것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국민참여위원을 대폭 확대시키는 형태로 가야 의견수렴도 하고 지역의 어떤 어려움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림의 어떤 참여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시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이 아니고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역별 국민참여위원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호 상임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안하신 것이고요. 앞으로 유념할 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 계획(안).

주문,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안전과 같이 의결한다.

(의 사 봉 3 타)

라. (심의·의결안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 (간사) 다음으로 심의·의결안전인 국민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발전총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집 58쪽입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간략하게 반영만 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명칭 및 운영을 이제까지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던 면이 있는데요. ‘본위원회’로 변경해서 표현을 명확히 수정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회의 공개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회의록·속기록 생성 및 공개에 대해서 2기 들어서 새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원회 운영과 그 외에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연석해서 할 수 있는 합동연석회의, 그리고 직무윤리 서약서를 받는 것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쪽부터 첨부한 운영규칙(안)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건 위원님.
- (김 건 위원) 저는 지금 저희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사항보다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안과 안전 발의, 그리고 상정 건이 담보가 되는 규칙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많은 사항들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더욱더 빠르게 저희가 수용하고 그 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손보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 또한 오늘 회의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회의를 되돌아보면 사실 상임위원분들께서 보통 안전에 대한 의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다 조금씩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의 구성상 상임위원분들도 모두 교육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임위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의 전에 보통 안전이 다 공유되고 상임위원 회의에서 의결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아니면 상임위원분들의 의견들이 미리 하나의 별도 의견서로 만들어져서 저희 본위원회 회의에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 의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먼저 이 의제를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여기 운영규칙 논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상임위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규칙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운영규칙(안)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위원회에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 이 논의는 한 달 뒤에 다시 하는데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 (간사) 예.
- (위원장) 한 달 정도 뒤인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은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마. (보고안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

- (간사) 마지막으로 보고안건인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자료집 70페이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과 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제고 등 전문위원의 운영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상근 전문위원의 운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위촉하되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단순한 자문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 사전검토부터 조사·연구, 정책대안 도출까지 쏠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전체회의 안전 사전검토,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 국내외 교육동향 및 혁신사례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전문위원은 교육·문화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인력은 시도교육청, 대학 등 외부 전문가 3명에서 5명과 국책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급 이상 인력 3명 등 총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파견 대상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문위원을 단계적으로 위촉하는 등 전문위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건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통 외부에 나가

서 자기소개나 그런 것을 하실 때 보통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전문위원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잘할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연취현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주요 업무가 특별위원회 지원 및 위원회 간 정책 정합성 검토인데 저희가 전문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위원회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까 김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있고 또 전문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정리가 사전에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전문위원회’는 법률상 정해진 명칭이기 때문에 3개 전문위원회가 있지요. 그 이름은 그대로 가야 되고, 그분들은 말씀대로 전문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 명칭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제도는 법률상 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처음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문위원 제도로 법률상 있기 때문에 명칭이 ‘전문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이 꾸려지면 전문위원실을 구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강은희 위원) 혹시 나중에 법령을 좀 개정하실 수 있으면 ‘연구위원’이 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연구위원’이요?
- (강은희 위원) 예. 이제 각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명칭의 혼돈이나 역할의 혼돈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법령 수준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 (위원장) 오늘 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상근을 하면서 우리 본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 (연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슈페이퍼 작성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대외 발표가 되는 이슈페이퍼 인가요? 여기 주요업무 중에 세 번째 줄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이슈페이퍼 작성 및 정책대안 제시인데 이것이 내부 자료로만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직접 공유가 되는 것인지,
- (위원장)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해야지요.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 (연취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역할이 모호하고, 특히 외부 전문가가 와서 위촉되어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인데 내부적으로 전문가로 전문 의견을 낸다는 것이 약간 운영상에 어려움이 아닐까,
- (위원장) 외부 전문가가 와서 그분이 혼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이슈페이퍼를 생산할 정도의 정책이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전문위원실이 구성되면 ‘전문위원실’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업무를 확충해 나가는 방식대로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교위 기능이 사실 의제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회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교위에 두 가지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과 중장기 발전계획, 여기에 상근으로 전문위원회를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 (연취현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연구위원’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합해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도 이슈페이퍼 발간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책 대안으로 한번 대안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해서 案을 여는 차원의 용어로 혼란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차후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반상진 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상근 전문위원’, ‘비상근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통칭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인데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21명의 전문위원이 있고요. 교육과정은 41명인가요? 45명인가요? 거기에 상근으로 몇 명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최대 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3명에서 5명,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3명, 이렇게 8명 정도 되는 분이 두 전문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명씩 배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확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그 결정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 (보고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전문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업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강은희 위원) 이것이 조금 성격이 명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전문위원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

- (위원장) 그것은 용어를 정확히 쓸 필요는 있고요. 전문위원회 위원이지고요. 이 전문위원 제도는 다른 제도이고요.
- (강은희 위원) 이 전문위원은 별도의,
- (위원장) 둘 다 법률에 있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런데 단어가 너무 똑같으니까요.
- (이광호 상임위원) 처음에 법령 만들 때 제가 같이 했으니까 하는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가지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상근 위원으로 할 것인가부터 말이 많았는데 다른 위원회들 보니까 또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상근 전문위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전문위원회는 비상근 전문,
- (강은희 위원) 비상근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된,
- (이광호 상임위원) 그래서 저희도 명칭을 고민했는데 다른 위원회 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그냥 ‘전문위원’이라고 붙인 것이고, 특히 노사정위원회 쪽에 전문위원이 많습니다. 다 ‘전문위원’ 이름을 쓰고, 저도 헛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른 명칭이 없어서 ‘전문위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연취현 위원)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 (반상진 위원) 용어도 용어이지만 이 역할 보면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근 전문위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을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의 상근 전문위원,
- (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더 포괄적인...
- (위원장)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결정을 안 했고요.

- (김 건 위원) 그래서 굳이 가능하다면 ‘전문연구위원’ 정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법률상 명칭이 ‘전문위원’입니다.
- (김 건 위원) 그것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5차 회의는 2월 12일 개최

7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장장 4시간 10분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신임 위원님들 첫날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